

독자권익위원 칼럼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문학박사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다. 그래서인지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들려오는 ‘출마(出馬)’라는 말의 본 뜻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정치권은 분주해진다. 출마자는 출마자대로 동분서주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판단과 이해에 따라 진영을 나누기도 한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예정자들의 합법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연일 무차별 SNS홍보 속에서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부담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마’라는 말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출마(出馬)는 글자 그대로 말을 타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뜻이다. 장수가 말 등에 올라 전장터로 나서듯, 정치인 역시 유권자 앞에 자신의 뜻과 능력을 드러내며 선택을 받는 길에 나서는 것이다.

선거 현장에서 흔히 쓰는 ‘유세(遊說)’라는 말도 흥미롭다. ‘유(遊)’는 돌아다닌다는 뜻이고, ‘설(說)’은 설득한다는 의미다. 곧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후보자는 유세를 통해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알리고, 유권자는 그 가운데 누구에게 공동체의 미래를 맡길지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유권자는 명마를 알아보는 감식가, 곧 ‘백

出馬, 말이 전하는 메시지

락(伯樂)’에 비유할 수 있다.

유목 문화권에서는 말·소·양·염소·낙타를 중요한 가축으로 여겼는데, 이를 오축(五畜)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말은 빠른 이동과 전쟁에 필수적인 존재였기에 특히 귀하게 여겨졌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국가의 군사력과 통신 능력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었다.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는 단순히 빠른 말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대를 감당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상징하는 문화적 비유로도 널리 쓰여 왔다.

옛사람들은 말의 쓰임을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번식을 위한 종마(種馬), 전쟁에 쓰는 용마(戎馬), 의장용 제마(齎馬), 역참의 교통수단인 도마(道馬), 사냥에 쓰는 전마(田馬), 잡역에 쓰는 노마(駕馬)가 그것이다.

옛말에 “말의 좋고 나쁨을 알려면 그 말이 끄는 수레를 보면 되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가 사는 집을 보면 된다”고 했다. 이를 ‘상마이여(相馬以廐) 상사이거(相士以厩)’라 한다.

말을 알아보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이름난 인물이 바로 백라이다. 백라의 본명은 손양(孫陽)으로, 주나라 때 사립이다. 원래 하늘에서 말을 관장하는 별자리의 이름이 ‘백라’이었다고 하는데, 손양의 감식 능력이 워낙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백라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백라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가 있다. 어느 날 한 말 장수가 아무도 말을 사지 않는데 탄식하고 있었다. 백라가 그 말을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훌륭한 준마였다. 그는 감탄하며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백라가 저토록 눈길을 주는 말이라면 분명 준마일 것”이라 여겨 말값이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예로부터 “천리마는 늘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백라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千里馬常有伯樂不常有)”라고 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평범한 사람 속에 묻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오늘날은 예전과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천리마가 백라를 기다려야 했다면, 초연결 사회인 오늘날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 명마는 언제나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는 백라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적임자를 찾는다는 뜻의 ‘물색(物色)’이라는 말도 말(馬)을 고르던 데서 유래했다. 단순히 ‘물건의 빛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을 고를 때 쓰는 말이다. 이때 빛깔이 같은 말을 색마(色馬), 힘이 같은 말을 물마(物馬)라고 한다. 말을 고를 때 색깔과 체력을 함께 살폈는데 이를 ‘물색’이라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뽑을 때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체적소의 합당한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하늘의 기운인 병(丙)과 땅의 기운인 오(午)가 어우러진 병오년은 정열과 에너지 넘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한다. 붉은 말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번영을 불러오는 상서로운 영물로 인식된다. 말은 거침없이 질주하는 강인한 체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해온 동물인 만큼 2026년 한 해는 역동적인 자세로 정제된 것들을 시원하게 뚫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기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공장을 지을 부지는 확보했지만, 전기를 언제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전력은 산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지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발전 설비의 부족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생산된 전력을 산업 현장과 도시로 원활하게 전달할 송배전망의 확충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역 간 전력 수요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력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전력 수요지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도 송전 용량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지

전력망 막히면 산업 멈춘다...국가 재정 투입해야

못해 사업 추진 지연을 우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한쪽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력이 부족해 산업 활동이 제약되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남 신안과 영광 일대에서 반복되는 출력제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송배전망 구축을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한 곳이 전담하는 현재의 투자 구조다. 전력망 확충에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근 한전의 재무 여건상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전력망은 단순한 공기업의 설비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망을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듯, 전력망 역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에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REPowerEU’ 계획을 통해 국가 간 송전망 연계 사업에 범유럽 차원의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력망 확충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을 제정하며 국가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예산 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전의 재무 여건이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이 임의 규정에 그친 현행 법·제도로는 전력망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전력망 확충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전반에 국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참여와 다양한 금융 조달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 구조를 다변화하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지금, 전력망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단순히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산된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의 길’을 먼저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송배전망 확충을 더 이상 공기업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취재수첩

도시 전체를 시험장으로

이 승 흥

경제부 부장



광주 전역(500.97km)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200대 규모 차량이 투입되고, 규제 특례와 재정·세계 지원이 동시에 적용된다. 특정 구간이 아닌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기술 검증의 범위를 넓힌 대신, 실험의 조건도 그만큼 복잡해졌다.

구성은 명확하다.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 에이투티, 라이드플릭스가 각각 완성차, 대중교통, 물류 영역을 맡는다. 차량에는 E2E(End-to-End)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체계가 적용된다. 도로 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이를 다시 주행에 반영하는 구조다. 기존의 구간 단위 실증이 ‘가능 확인’에 가까웠다면, 이번 시도는 도시 환경 전반에서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적용 환경이다. 도시 단위 실증은 교차로, 골목길, 불법 주차장, 보행자 이동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생활권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의 빈도가 높고, 교통 흐름도 일정하지 않다. 자율주행 기술이 이 복합 환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실증은 곧바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성능보다 운영 안정성이 먼저 확인돼야 하는 이유다.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에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트럭’ 구상이 적용되면

서 제도적 제약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규제를 푸는 것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보험 적용 범위, 긴급 상황 대응 절차 등 기본적인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속도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증 이후의 단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산업 전환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증만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들어오며, 시험·인증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복수 산업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으로는 확장이 어렵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을 도시 전략으로 설정해 왔다. 이번 실증도시는 그 연장선이다. 조건은 갖춰졌지만, 성과는 별도의 문제다. 데이터 축적, 안전성 검증, 제도 정비, 산업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실증이 의미를 갖는다. 도시 단위 실증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영 체계와 산업 기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설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적 지질명소됐다

중생대 백악기 말(8700~8500만년 전) 화산폭발 결과로 형성된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에 위치한 면적 1051km<sup>2</sup>의 세계적 지질 명소다.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화산의 서유리공룡화석지, 담양의 추월산 등 많은 지질유산이 분포돼 있고 오랜시간 이들과 어우러져 생겨난 역사, 문화, 생태 유산들도 뛰어나서다. 특히 10만년동안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데다 한반도 중생대 공룡의 다양성과 공룡가속도 이론이 규명된 화석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 학술 가치 또한 높다. 이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에는 국가지질공원이 됐다.

이런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3연속 인증을 받았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공식 누리집에 등재된 것이다.

2018년 4월 최초 인증 이후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재인증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첫 번째 재인증 당시 유네스코가 제시했던 지질유산 보존, 가시성 향상, 파트너십 구축, 교육역량 강화 등 4가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빼어난 지질·역사·문화·생태적 가치도 한몫을 했지만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유리 공룡화석지 보존을 위해 고해상도 구축 용역을 추진했고, 금강산을 신규 지질명소로 지정하는 등 지질유산 보존 및 가치 발굴에 힘써왔다.

또 대형 안내판과 도로표지판 설치를 통해 현장 인지도를 높이고, 자매공원과 협력해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가시성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이어 무등산수박 생산자조합 및 평촌마을과 협약을 맺어 지역 특산물과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속 가능 발전목표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지질공원 운영의 내실도 다져왔다.

무엇보다 이들 지자체들이 행정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세계지질공원을 공동 운영·관리하는 협력모델을 선보인 점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더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광주서 창업해도 유니콘 기업 될 수 있기를

광주가 ‘테크(기술) 창업도시’로 거듭 태어난다. 이는 최근 열린 정부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대전·대구·울산과 함께 ‘4대 테크 창업 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전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이번 테크 창업도시에 우선 선정됐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미래에너지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창업부터 성장·정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창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즉, GIST와 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정착한 인재들이 창업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재 밀착형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창업도시 진입을 목표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다테크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500개사를 발굴·양성하는 대규모 창업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AI, 에너지,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과 실증 인프라를 광주 전역에 촘촘히 깔아, 도시 전체를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창업 시험무대’로 전환키로 했다. 또 2027년까지 GIST를 ‘다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GIST 내 ‘창업원’을 신설하는 한편 우수 인재들의 창업도전을 가로 막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연구원과 교수진이 실험적인 다테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창업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의 벽’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 ‘전남광주 스페일업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력이 있다면 신속하게 투자가 이뤄지는 ‘원클릭’ 수준의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로 지역 내 연구소, 대학,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추진단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R&D, 실증, 투자 유치에 이르는 창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민관협력(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테크 창업도시 선정이 광주에서 창업해도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되는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lumns: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City and GIST.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